



총평 막 내린 '제14회 제주포럼', 과제는

정부 외면에 동네잔치 전략... "방향 바꿔야"

포럼 전체 세션 절반 이상이 '외교·안보' 분야에 한정
역대 최대 참가자 수 기록에도 국내외서 주목 못 받아
대통령·국무총리 등 불참... 질적 측면에서도 아쉬움

지난달 31일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을 주제로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막을 내렸다. 하지만 도내는 물론 국내외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마무리되면서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는 구상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년째는 맞는 내년에는 제주포럼의 목표와 방향의 재설정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이번 제주포럼은 규모 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제주포

럼을 주최한 제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참가자는 5640여명으로 역대 최대 참가수를 보였으며, 참가국은 지난해 71개국에서 올해 85개국으로 늘었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이 컸다. 올해 제주포럼에는 전 세계 지도자와 전·현직 고위 인사, 주한 외교단, 국제기구 대표, 학자, 기업인, 언론인 등 수천명이 참석해 다양한 국제적 의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션의 주제가 중복되는 데다, 국외는 물론 국내 이슈를 인지도 못하고 끝마쳐 헛구호

에 그쳐 아쉬움을 샀다. 실제로 전체 73개의 세션 중 외교·안보 분야 등 시세션은 53%였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창조적 로드맵'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평가 및 향후 과제'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전망' '한반도 비핵화 종지부: 어떻게 찍을 것인가' 등 주요 주제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맞춘 설정이지만, 세션 주최 기관만 다른 비슷한 주제로 포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기엔 부족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포럼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도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난해 직접 참석해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했

며, 지난 2017년 제주포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개회를 선언한 바 있다. 앞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제1회 제주포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제2회와 2007년 제4회 포럼에 각각 참석해 행사의 위상을 높였다. 이런 가운데 올해 포럼 참석을 약속했던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과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갑자기 불참,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위기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을지태극훈련 기간과 맞물려 정부 인사들이 대거 불참하게 된 것"이라며 "올해 여러 지적 사항들을 검토해 내년 제주포럼은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동아시아 중심 제주에 인권재판소 설치해야"

평화세션서 의견 제시

'세계평화의 섬'이자 동아시아 중심인 제주도에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2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의 평화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UNDP(유엔개발계획) 총재를 지낸 헬렌 클라크(Helen CLARK) 전 뉴질랜드 총리는 3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A홀에서 열린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 전체세션Ⅱ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클라크 전 총리는 "선도적인 도시들은 다른 사람의 실적을 끌어내며, 거버넌스에 있어 좀 더 포용적"이라며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비전과 열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강조했다. 클라크 전 총리는 "인간의 건강, 복지, 환경에 대가를 치르려라

"공동체 가치 위해 개발 속도 제한해야"

클라크 전 UNDP 총재 원 지사와 대담서 제안

도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권한 부여와 시민들의 참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계획, 민간 재원 조달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UNDP(유엔개발계획) 총재를 지낸 헬렌 클라크(Helen CLARK) 전 뉴질랜드 총리는 3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A홀에서 열린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 전체세션Ⅱ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클라크 전 총리는 "선도적인 도시들은 다른 사람의 실적을 끌어내며, 거버넌스에 있어 좀 더 포용적"이라며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비전과 열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강조했다. 클라크 전 총리는 "인간의 건강, 복지, 환경에 대가를 치르려라



지난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A홀에서 열린 제14회 제주포럼 전체세션Ⅱ에서 헬렌 클라크 전 유엔개발계획 총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담하고 있다. 사진=제주포럼 사무국 제공

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끝날 때가 됐다"며 "미래 도시는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기회와 안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클라크 전 총리와의 대담이 이어졌다. 원 지사는 "제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 쓰레기 등의 도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겪고 있다"며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조화된 공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합의

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말했다. 이에 클라크 전 총리는 "지역공동체 가치 추구를 위해 개발 속도를 제한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제주와 뉴질랜드의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소진기자

제주의 속살 거닐며 힐링하세요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4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회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인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걸으면서 일상의 쉼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에코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6월 15일 8시 ~ 16시
▶대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 (20세 이상 성인 참여 가능)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코스: 켈물오름 주차장 ~ 켈물오름 ~ 죽은노꼬매 ~ 죽은노꼬매 들레길 ~ 숲길 ~ 고성천 ~ 산세미오름 ~ 산록도로
▶집결지: 정부제주지방법원등정사 정문,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준비물: 배낭, 등산화,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신청기간: 2019년 6월 3일 ~ 6월 11일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에코투어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
▶참가비: 1만2천원 (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한라일보사)
▶문의: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 064)750-2291, 2151

"공사장 주변서 멸종위기종 확인" 도, 비자림로 확장 공사 일시 중단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조사
2014년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멸종위기야생조류(팔색조)와 천연기념물(황조롱이), 희귀식물(붓순나무) 등이 공사장 주변에서 확인됐다고 지난 5월 28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던 중이었다는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 달 30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오는 6월 4일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 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되면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할 방침이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공사 시행으로 인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표성준기자

제주4·3사건 관련 유족증 발급 및 복지 지원 안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조비 신청, 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등 복지지원 안내사항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복
지
내
용

생활보조비

- 지원대상: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생존희생자(후유장애, 수형)로 인정·결정된 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중 75세이상 1세대 유족
- 지원내용: 생존희생자 70만원, 유족 1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매월 지원
- 신청: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지원신청: 제주자치도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생활보조비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
- *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기준 등록기준지(제주자치도)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생존자 의료비

- 지원대상: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생존희생자(후유장애, 수형)로 인정·결정된 자
- 지원내용
 - 도내 지정 병원 약국 의료비 및 입원비(본인 부담 100%, 비급여 본인 부담)
 - 비급여 진료비(MRI 등 비급여 특수 촬영비, 연간 30만원 이내)
 - 건강검진비(연 1회, 건강검진 실시, 1인당 40만원 이내)
 - 장제비(대상자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 장례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지급)

유족 진료비

- 지원대상: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자중 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단,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머느리 진료비

- 지원대상: 제주4·3희생자 머느리(자부)중 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단,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4·3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안내

- 지원대상: 제주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 신청접수: '19. 4. 1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도내 거주자(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국외거주자(제주도 4·3지원과)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위임장,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3×4) * 신청서: 읍면동 및 도청 홈페이지 "유족증" 클릭